

2024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90만 7천원
- 징수결정액 : 1억 3천 4백 98만 4천원
- 실제수납액 : 2천 7백 83만 1천원
- 결손처분액 : 0천원
- 미수납액 : 1억 7백 15만 3천원
-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3068.5%(전년도는 세입 없음)임.

〈 2024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액(D)		미수납액 (E)=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정리 보류	시효 완성			
합 계	907	134,984	27,831	-	-	107,153	3068.5	20.6
세외수입	907	134,984	27,831	-	-	107,153	3068.5	20.6
경상적세외수입	32	1,744	1,693	-	-	51	5289.2	97.1
임시적세외수입	875	26,141	26,139	-	-	2	2987.3	100.0
지방행정제재·부 과금	-	107,100	-	-	-	107,100		0.0

※ 결손액=정리보류+시효완성,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2. 세출결산

- 당초예산 : 11억 6천 5백 97만 9천원
- 예산증감 : -2천 4백 82만 4천원
- 예산현액 : 11억 4천 1백 15만 5천원
- 지출액 : 10억 6천 3백 50만 7천원
- 이월액 : 0천원
- 집행잔액 : 7천 7백 64만 8천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6.8%(전년도 5.4%)가 발생
 - 집행잔액 사유별 금액은 지출잔액 7천 7백 64만 7천원임.

〈 2024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사업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총	예 산	1,141,155	1,063,507		77,648	6.8
사	업 예 산 계	977,667	915,301		62,366	6.4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544,152	520,168		23,984	4.4
	고충민원 및 청원의 적극적 해결	157,422	144,249		13,173	8.4
	고충민원 조사 처리	43,260	43,251		9	0.0
	청원사항의 처리	15,275	13,744		1,531	10.0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3,887	23,567		320	1.3
	현장민원 내지역지킴이 운영	75,000	63,687		11,313	15.1
	시민참여 활성화	244,300	2399,412		4,888	2.0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34,200	34,200		-	0.0
	공공사업 감시평가	172,500	168,739		3,761	2.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운영	37,600	36,473		1,127	3.0
	위원회 직무역량 및 위상 강화	142,430	136,507		5,923	4.2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확대	121,446	117,355		4,091	3.4
	세계옴부즈만협회(IO)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20,984	19,152		1,832	8.7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433,515	395,133		38,382	8.9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433,515	395,133		38,382	8.9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61,940	55,904		6,036	9.7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29,940	25,192		4,748	15.9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62,460	56,456		6,004	9.6
	인권정책 홍보 강화	6,000	5,992		8	0.1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97,200	81,017		16,183	16.6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47,800	43,179		4,621	9.7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113,100	113,100		-	0.0
	인권지킴이단 운영	5,000	4,998		2	0.0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10,075	9,295		780	7.7
	일 반 예 산 계	163,488	148,209		15,279	9.3
기 본 경 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26,348	111,070		15,278	12.1
기 본 경 비 (인권담당관)		37,140	37,139		1	0.0

가.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나. 예산 전용

-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하는 정부광고의 예산편성 기준이 2024년 신설됨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는 홍보 예산확보를 위해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확대” 중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천 8백만원 총 1건, 2천 8백만원을 전용하였음.

다. 예산 이체

- 2024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업비 이체	6천 1백 94만원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사업비 이체	2천 9백 94만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사업비 이체	6천 2백 46만원
“인권정책 홍보 강화” 사업비 이체	6백만원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사업비 이체	9천 7백 20만원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비 이체	4천 7백 80만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비 이체	1억 1천 3백 10만원
“인권지킴이단 운영” 사업비 이체	5백만원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사업비 이체	1천 75천원
등 총 9개 사업, 4억 3천 3백 51만 5천원을 이체하였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2024년 국제 옴부즈만 정상 회담 참석 주제 발표 자료 영문 번역 및 통역비 필요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중 ‘국외업무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14만원
 - 2024. 7. 1.자 조직개편에 따른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예산확보를 위해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에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30만원
- 등 총 2건, 144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마. 예비비 사용 : 해당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 해당 없음.

3. 기금결산 : 해당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 없음.

[illegible]

II. 검토의견

1. 세입결산

가. 과학적인 세입추계 필요

- 2024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90만 7천원이나, 1억 3천 5백만원 징수 결정되어 2천 8백만원이 수납되었고, 1억 7백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3,068.5%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20.6%로 세입징수 실적이 전년도(100.0%) 대비 79.4% 감소한 수준으로, 이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 ‘부정이익환수금’ 1억 7백만원 미수납에 따른 것임.

〈 2024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액(D)		미수납액 (E)=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정리 보류	시효 완성			
합 계	907	134,984	27,831	-	-	107,153	3068.5	20.6
세 외 수 입	907	134,984	27,831	-	-	107,153	3068.5	20.6
경 상 적 세 외 수 입	32	1,744	1,693	-	-	51	5289.2	97.1
이 자 수 입	32	1,744	1,693	-	-	51	5289.2	97.1
기 타 이 자 수 입	32	1,744	1,693	-	-	51	5289.2	97.1
임 시 적 세 외 수 입	875	26,141	26,139	-	-	2	2987.3	100.0
보 조 금 반 환 수 입	875	26,141	26,139	-	-	2	2987.3	100.0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	25,725	25,725	-	-	-	0.0	100.0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875	2	-	-	-	2	0.0	0.0
기 타 수 입	-	414	414	-	-	-	0.0	100.0
그 외 수 입	-	414	414	-	-	-		1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107,100	-	-	-	107,100		0.0
환 수 금	-	107,100	-	-	-	107,100		0.0
부 정 이 익 환 수 금	-	107,100	-	-	-	107,100		0.0

-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의 각 세목별 예산현액 대비 징수액(실제수납액)을 살펴보면,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그외수입’, ‘부정이익환수금’은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징수결정하여 세입 조치하였고,
- ‘기타이자수입’은 예산현액(3만 2천원)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5,289.2% (169만 2천원)으로 실제수납액이 과다하게 차이나고 있으며,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예산현액은 87만 5천원이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2천원으로 과다하게 차이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과다한 차이 발생 내역 〉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현액(A)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B)	과부족액(B-A)	비율
기타이자수입	32,000	1,743,780	1,692,530	1,660,530	5,289.2%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0	25,725,230	25,725,230	25,725,230	순증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875,000	1,860	0	△875,000	-
그외수입	0	413,570	413,570	413,570	순증
부정이익환수금	0	107,100,000	0	0	-

▶ 과부족 상세 사유

- 기타이자수입 :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사업 보조금 이자액 예상치보다 과소 발생 및 자치구별 ‘내 지역 지킴이’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 전액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 미편성
-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 자치구별 ‘내 지역 지킴이’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 전액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 미편성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예상치보다 과소 발생
- 그외수입 : 시민참여옴부즈만 수당 오지급으로 인한 반납금 및 2023년 관내 출장여비 착오 지급으로 인한 반납금
- 부정이익환수금 : 체납(미수납) 발생, 38세금징수과와의 협업하여 압류 등 진행, “2021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부정이익환수금 : 17,000천원, 제재부가금 : 85,000천원, 가산금 : 5,1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은 “현장민원 내지역지킴이 운영” 사업에서 25개 자치구의 ‘내 지역 지킴이’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활동 물품 지원을 위한 시비 보조사업에서 전년도(2023회계연도)에 자치구에 교부한 시비보조금의

정산에 따른 반환금(이자 포함)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예산과목으로, 위원회는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 전액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여 세입 예산(‘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을 미편성하였으나 2천 572만원의 과도한 세입이 발생하였음.

※ “현장민원 내지역지킴이 운영” 사업은 25개 자치구 내 지역 지킴이 물품(조끼, 플래시 등)과 위촉장 등 인쇄비를 위한 것으로, 2023년 5월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 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5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는 자치구 등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에 있어서 자치구 등의 집행 노력 부족에 따른 반납액 발생으로, 편성된 예산이 자치구에서 차질없이 집행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나. ‘부정이익환수금’ 미수납액 적극적인 징수 필요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중 징수결정 후 ‘부정이익환수금’은 전액(1억 7백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했음.

〈 2024회계연도 ‘미수납액’ 현황 〉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현액(A)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B)	미수납액
합계	907,000	108,845,640	1,692,530	107,153,110
기타이자수입	32,000	1,743,780	1,692,530	51,250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875,000	1,860	0	1,860
부정이익환수금	0	107,100,000	0	107,100,000

- ‘부정이익환수금(1억 7백만원)’은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 사업 자체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 보조사업 부실 수행 및 거짓 신청·부정한 방법을 통한 보조금 수령 정황이 발견되어, ‘2024년 보조금 교부 결정 전부 취소’에 따른 보조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처분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24년 전액 미수납 상태임.

〈 ‘부정이익환수금’ 발생 개요 및 현황 〉

단체명	부정이익 환수금		미수납액
사단법인 한국진로직업개발원	보조금 전액 환수액 : 17,000,000원	총 107,100,000원	107,100,000원
	제재부가금 : 85,000,000원(부과율 500%)		
	가산금 : 5,100,000원		

- '21년 (사)한국진로직업개발원은 '2021년 인권 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돌봄 종사자 간의 권리옹호와 인식개선 프로젝트' 사업 운영을 명목으로 **보조금 17,000,000원을 교부**받음.
- '23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 자체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 보조사업 부실수행 및 거짓 신청·부정한 방법을 통한 보조금 수령** 정황이 발견되어, '24년 보조금 교부 결정 전부 취소에 따른 보조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처분 절차 진행
- 현재 전액 체납(미수납) 상태이며, 38세금징수과에서 체납 인수
- 근거 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1조 및 제35조

※ 출처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25년 5월 29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 ‘부정이익환수금(1억 7백만원)’은 지방 보조사업 부실 수행 및 거짓 신청·부정한 방법을 통한 보조금 수령에 기인한 것으로, 당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민간 보조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거짓 신청 등을 걸러내지 못한 인권담당관의 해명 및 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그외수입’ 저감 노력 필요

- ‘그외수입’은 2023회계연도에 발생한 수당 반납으로, 당초 편성한 예산은 없었으나 수납액 61만원이 발생하고 있음.
- ‘그외수입’은 2023회계연도 발생한 수당 오지급 반납 및 착오 지급 반납 등 (61만원)을 다음연도인 2024년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것임.¹⁾

〈 2024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그외수입’ 세부내역 〉

(단위 : 원)

징수결정일자	실제수납액	과세내역 및 처리사유
2024-03-11	200,000	시민참여옴부즈만 수당 오지급 반납 1건(과오납 반납)
2024-04-03	90,000	관내 출장여비 착오 지급 반납 8건
2024-06-13	327,540	시간외근무수당 반납 1건
합 계	617,540	

- 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청원의 처리,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로 시정감시 기능 강화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높은 법질서 의식이 요구되므로, 규정에 맞지 않는 수당 등의 지급 및 반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당 지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

2. 임시적 세외수입

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 1) 과징금 2) 이행강제금 3) 부담금
- 4) 변상금 5) 과태료 6) 환수금 7) 범칙금

나. 그 밖의 임시적 세외수입

- 1) 재산매각 수입 2)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3) 보조금 반환수입
- 4) 기타수입 5) 지난연도수입

- 결론적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²⁾ 위원회는 최근 5년간 세입예산 편성 없는 세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의 정확한 징수 및 편성은 전체 세입·세출 규모의 합리적 판단 및 예산 편성·집행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원회는 향후 세입예산 편성시 “건정재정운영의 원칙(「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세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세입예산에 대하여 철저한 추계 후 적정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5년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세입예산 편성 없는 수납 내역 〉

(단위 : 원)

회계연도	예산과목	예산액(A)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B)	미수납액
2024	기 타 이 자 수 입	32,000	1,743,780	1,692,530	51,250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0	25,725,230	25,725,230	0
	자 체 보 조 금 등 반 환 수 입	875,000	1,860	0	1,860
	그 외 수 입	0	413,570	413,570	0
	지 난 년 도 수 입	0	0	0	0
	부 정 이 익 환 수 금	0	107,100,000	0	107,100,000
2023	위 탁 비 반 환 수 입	-	948,660	948,660	-
	기 타 이 자 수 입	-	42,050	42,050	-
2022	그 외 수 입	-	80,500	80,500	-
2021	-	-	-	-	-
2020	그 외 수 입	-	457,940	457,940	-

2)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2. 세출결산

- 2024회계연도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현액 11억 4천 1백만원 중 10억 6천 3백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은 6.8%(불용액 7천 8백만원)로 전년(5.4%)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2.0%)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바, 사업관리와 예산집행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24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사업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총 예 산	1,141,155	1,063,507		77,648	6.8
사 업 예 산 계	977,667	915,301		62,366	6.4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544,152	520,168		23,984	4.4
고충민원 및 청원의 적극적 해결	157,422	144,249		13,173	8.4
고충민원 조사 처리	43,260	43,251		9	0.0
청원사항의 처리	15,275	13,744		1,531	10.0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3,887	23,567		320	1.3
현장민원 내지역지킴이 운영	75,000	63,687		11,313	15.1
시민참여 활성화	244,300	2399,412		4,888	2.0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34,200	34,200		-	0.0
공공사업 감시평가	172,500	168,739		3,761	2.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운영	37,600	36,473		1,127	3.0
위원회 직무역량 및 위상 강화	142,430	136,507		5,923	4.2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확대	121,446	117,355		4,091	3.4
세계옴부즈만협회(IO)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20,984	19,152		1,832	8.7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433,515	395,133		38,382	8.9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433,515	395,133		38,382	8.9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61,940	55,904		6,036	9.7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29,940	25,192		4,748	15.9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62,460	56,456		6,004	9.6
	인권정책 홍보 강화	6,000	5,992		8	0.1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97,200	81,017		16,183	16.6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47,800	43,179		4,621	9.7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113,100	113,100		-	0.0
	인권지킴이단 운영	5,000	4,998		2	0.0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10,075	9,295		780	7.7
일 반 예 산 계		163,488	148,209		15,279	9.3
기 본 경 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26,348	111,070		15,278	12.1
기 본 경 비 (인권담당관)		37,140	37,139		1	0.0

가.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 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예산 전용 1건, 2천 8백만원, 변경사용 2건, 1천 4백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4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전용’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확대	사무관리비	82,600	28,000		2024.2.20.	54,600	51,561	3,039 (5.6%)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8,000	2024.2.20.	28,000	27,944	56 (02.%)

〈 2024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변경사용’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1,200	300		2024.7.16.	900	20	880 (97.7%)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6,000		300		6,300	6,300	0 (0.0%)
세계옴부즈만협 회(IOI)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국외업무 여비	10,000	1,140		2024.11.25.	8,860	8,849	11 (0.1%)
	사무관리비	3,900		1,140		5,040	5,022	18 (0.4%)

- “위원회 직무역량강화 및 홍보확대” 사업 ‘사무관리비’ 중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할, 사례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위원회 위상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2023년 7월)』에서 광고비용 편성·집행시, 「정부광고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세출과목 변경((기존) ‘사무관리비’ → (변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따라 홍보 예산을 세출예산의 성질 및 사용 목적에 맞게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천 8백만원을 전용하였음.³⁾

〈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광고비용’ 예산과목 변경 〉

현 행		개 정	
201 일반 운영비	01. 사무관리비	201 일반 운영비	01.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가.~바. (생략) 사.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광고료 및 광고료 1)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광고료는 해당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비목에 계상 2) 보도사례금은 계상할 수 없음		1. 일반수용비 가.~바. (생략) 사.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광고료 및 광고료 1)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광고료는 해당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비목에 계상 2) 보도사례금은 계상할 수 없음

3)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지방재정법」 제49조).

현 행		개 정	
	아.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자. 기타		<u>사.</u>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u>아.</u> 기타
308 자치 단체등 이전	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성적 위탁사업비	308	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성적 위탁사업비
	1. ~ 2. (생략) <신 설>	자치 단체등 이전	1. ~ 2. (생략) <u>3. 「정부광고법」 제8조에 따른 정부 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u> <u>※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광고료는 해당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비목에 계상</u>

※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23년 7월, 28면.

- 이는 예산 편성과정 중 기준 변경에 따른 통계목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한 예산 전용으로 위원회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 예산편성 담당자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에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30만원을 변경사용하였는바, 이는 서울시 조직개편(‘24.7.1.자)에 따라 인권담당관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이관되어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족분 발생으로 변경사용하였다고 하였으나, 4)
- 위원회 2024년 5월 서울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⁵⁾에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증액 편성(당초예산 420만원 → 추가경정예산 600만원)후에도, 다시 부족분(30만원) 발생으로 변경사용(‘24.7.16.)하는 등 예산의 착오편성으로, 변경사용을 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바, 위원회는 예산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4)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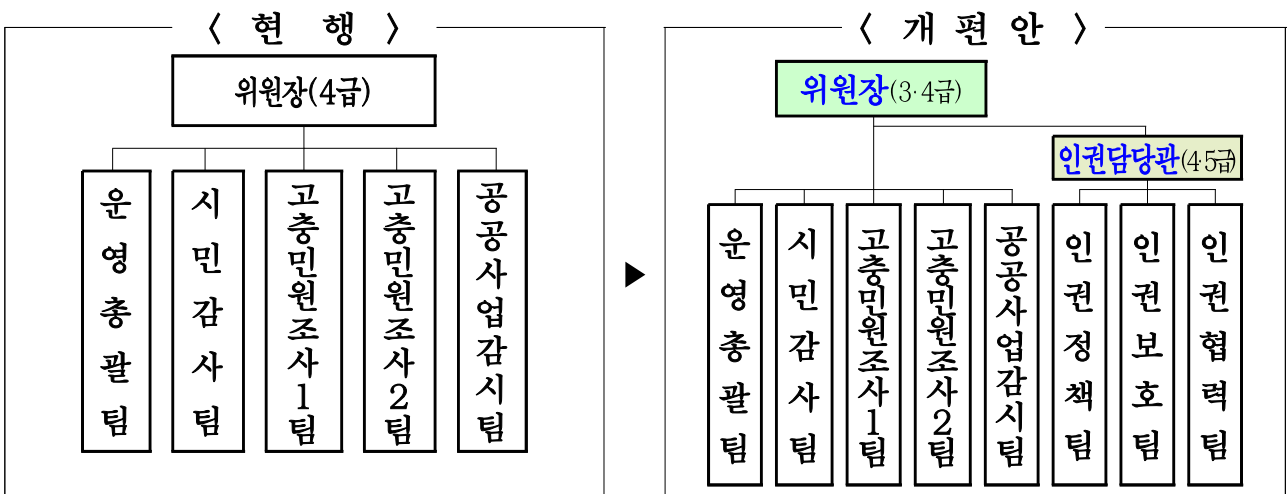
5) 서울특별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1819), 제안일 2024년 5월 27일.

※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기본경비에 편성함. ‘직책급업무수행경비’의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음.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기본경비” 중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현황 〉
(단위 : 천원)

과목		당초 예산액	제1회 추경	변경 사용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기본경비	직책급업무 수행경비	4,200	1,800	300	6,300	6,300	0	0 (0.0%)

〈 2024년 7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직개편안 〉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급 기관장(월 40만원)이 아닌 4급 보조기관(월 35만원)으로 책정하여 상반기(1~6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과소편성을 소급하여 추가 편성, 서울시 조직개편(2024.7.1.자)에 따라 위원회 확대·개편(감사위원회로부터 인권담당관 이관)으로 인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직책 승격(개방형 4급 → 복수직 3급)으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증액 편성.

- 또한,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사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 예산 운영형태로서, 위원회는 ‘전용’이나 ‘변경사용’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 예산에 대한 정확성 및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적정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

- 2024회계연도는 1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이 있었고, 위원회는 제1회 추경에서 인권담당관의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3천 1백만원)” 감액 1건과 위원회 “기본경비(630만원)” 증액 1건 등이 있었음.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이월 및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과목		당초 예산액	제1회 추경	변경 사용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기본경비	국내여비	23,100	4,501	-	27,601	13,246	-	14,355 (52.0%)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기본경비	직책급업무 수행경비	4,200	1,800	300	6,300	6,300	0	0 (0.0%)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41,200	△31,125	-	10,075	9,295	-	780 (7.7%)

※ 불용사유

▶ (국내여비) 부서 청사 이전('24년 6월), 조직개편('24년 7월)에 따른 출장 감소 및 위원회 관용차('23년 8월 구입) 사용 등으로 인해 국내여비 집행을 저조

- 위원회의 “기본경비” 중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출장여비인 ‘국내 여비’는 2024년 제1회(5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450만원 증액하여 2천 7백만원 중 1천 3백만원을 집행하고, 52.0% 규모인 1천 4백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 이는 당초 추가경정예산으로 ‘국내여비’의 증액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집행잔액을 발생시켜 불용처리함으로써 소중한 재원을 사장(死藏)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건정재정 운영의 원칙(「지방자치법」 제137조)”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임.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또한, 위원회는 ‘국내여비’ 불용 사유를 부서 청사 이전(’24년 6월), 조직 개편(’24년 7월)에 따른 출장 감소 및 위원회 관용차 사용 등으로 ‘국내여비’ 지급이 감소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국내여비’ 집행현황을 살펴 보면, 과도한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22년 2천2백만원 → ’23년 360만원 → ’24년 1천 4백만원), 이는 당초 ‘국내여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위원회는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적정한 인력 운영계획 및 구체적인 기준을 통한 예산 수립으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국내여비’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29,400	7,310	22,090 (75.1%)	12,530	8,931	3,599 (28.7%)	27,601	13,246	14,355 (52.0%)

다. 예산불용 과다 사업 검토

- 2024회계연도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11억 4천 1백만원 중 10억 6천 3백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은 6.8%(불용액 7천 8백만원)로 전년 (5.4%) 대비 1.4% 증가하였음.

※ 2024회계연도 서울시 전체 불용률은 2.7%(일반회계 2.0%, 특별회계 4.4%)임.

〈 2024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사업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총	예 산	1,141,155	1,063,507		77,648	6.8
사	업 예 산 계	977,667	915,301		62,366	6.4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544,152	520,168		23,984	4.4
	고충민원 및 청원의 적극적 해결	157,422	144,249		13,173	8.4
	시민참여 활성화	244,300	2399,412		4,888	2.0
	위원회 직무역량 및 위상 강화	142,430	136,507		5,923	4.2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433,515	395,133		38,382	8.9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433,515	395,133		38,382	8.9
일 반 예 산 계		163,488	148,209		15,279	9.3
기 본 경 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26,348	111,070		15,278	12.1
기 본 경 비 (인권담당관)		37,140	37,139		1	0.0

- 20% 이상 불용률 발생사업 현황(통계목별)을 살펴보면, “세계옴부즈만협회 (IOI) 가입에 따른 국제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사업 중 ‘국제부담금’은 180만원(불용률 25.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90만원(불용률 97.7%), ‘국내여비’ 1천 430만원(불용률 52.0%), “서울특별시 인권 위원회 운영” 중 ‘특정업무경비’ 560만원(불용률 28.8%)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음.

〈 20% 이상 불용률 발생 현황 및 불용 사유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불 용 사 유
세계옴부즈만협회 (IOI) 가입에 따른 국제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국제 부담금	7,084	5,281	1,803	25.4%	세계옴부즈만협회 총회 및 컨퍼런스 참가비 집행 잔액 등 발생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불 용 사 유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기본경비	공공 운영비	900	20	880	97.7%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위원회 차량은 2023년 신차로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점검 및 수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집행 부진
	국내여비	27,601	13,246	14,355	52.0%	부서 청사 이전('24년 6월), 조직개편('24년 7월)에 따른 출장 감소 및 위원회 관용차('23년 8월) 사용 등으로 인해 국내여비 집행률 저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특정업무 경비	19,440	13,832	5,608	28.8%	현원 감소에 따른 특정업무 경비 집행액 감소

-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의 대소를 떠나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므로, 위원회는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정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규모의 예산편성 및 합리적 예산 운용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수당’

- 위원회는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감사·조사·감시 활동에 있어 신뢰도 제고 및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법률자문 수당’ 3천 280만원 편성하여 10.4%(불용액 340만원)를 불용처리 하고 있음.
- 최근 2년간 위원회 사업별로 ‘법률자문단 수당(사무관리비)’ 예산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청원사항의 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사업의 법률자문수당은 2023년과 2024년 전액 불용처리 하고 있음.

〈 최근 2년간 ‘법률자문단 수당’ 예산 및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세부사업(통계목)	세부내역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4	고충민원 조사 처리 (사무관리비)	고충민원 조사 등 외부전문가 법률수당 등	22,200	22,200	0	0
		민원배심제 운영 중 법률자문 수당	1,200	1,200	0	0
	청원사항의 처리 (사무관리비)	청원사항 조사 등 외부전문가 법률자문 수당	400	0	400	100.0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사무관리비)	법률자문단 자문회의 참석수당	6,000	6,000	0	0
	공공사업 감시평가 (사무관리비)	공공사업 감시평가 외부전문가 법률자문수당	3,000	0	3,000	100.0
2023	고충민원 조사 처리 (사무관리비)	고충민원 조사 등 외부전문가 법률수당 등	22,200	22,000	0	0
		민원배심제 운영 중 법률자문 수당	6,500	0	6,500	100.0
	청원사항의 처리 (사무관리비)	청원사항 조사 등 외부전문가 법률자문 수당	3,000	0	3,000	100.0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사무관리비)	법률자문단 자문회의 참석수당	-	-	-	-
	공공사업 감시평가 (사무관리비)	공공사업 감시평가 외부전문가 법률자문수당	3,000	0	3,000	100.0

- 이는 위원회의 비효율적 예산편성에 따른 것으로, 향후에는 실소요 예산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을 불용처리 않도록 효율적 집행을 위한 노력은 물론, 당초 예산 설계와 달리 불용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추경 등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현장민원 내지역지킴이 운영” 사업

- “현장민원 내지역지킴이 운영” 사업은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해 25개 자치구 주민으로 구성된 ‘내 지역 지킴이’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활동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여 1천 130만원(불용률 15.1%)을 불용처리 하였음.

〈 “현장민원 내지역지킴이 운영” 사업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현장민원 내지역지킴이 운영	75,000	63,687	11,313	15.1%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75,000	63,687	11,313	15.1%

- “현장민원 내지역지킴이 운영” 사업 예산은 자치구 예산(5:5)과 매칭하여 지원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도봉구, 서대문구, 송파구는 구비추경편성 곤란으로 결국 시비를 교부하지 못했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치구 중 강남구와 강동구는 교부액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였는바, 위원회는 보조금으로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보조금 교부 후 그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집행을 독려하는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4년 ‘내 지역 지킴이 운영비(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구 교부 및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자치구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내 지역 지킴이 운영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종로구	2,920	2,585	335	
	중구	3,380	3,156	224	
	용산구	2,580	2,580	-	
	성동구	1,640	1,640	-	

사업명	자치구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광진구	1,200	1,198	2	
	동대문구	2,080	1,101	979	
	중랑구	2,500	2,500	-	
	성북구	3,050	3,050	-	
	강북구	2,140	2,085	55	
	도봉구	-	-	-	
	노원구	1,740	1,740	-	
	은평구	2,440	2,440	-	
	서대문구	-	-	-	
	마포구	2,380	2,380	-	
	양천구	2,710	2,705	5	
	강서구	7,980	7,980	-	
	구로구	2,710	2,710	-	
	금천구	1,740	1,729	11	
	영등포구	1,756	1,756	-	
	동작구	2,320	2,320	-	
	관악구	3,410	3,410	-	
	서초구	2,700	2,700	-	
	강남구	7,481	-	7,481	
	송파구	-	-	-	
	강동구	2,830	-	2,830	
합 계		63,687	51,765	11,922	

- 또한, ‘내 지역 지킴이 운영비(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업은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자치구로 교부하는 보조금은 집행가능성 및 준비상태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사업 계획과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예산집행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바, 각 사업별 실소요 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집행 하고, 편성된 예산을 불용처리 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2년간 ‘내 지역 지킴이 운영비(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통계목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23	255,000	229,275	25,725	10.1%
	2024	75,000	63,687	11,313	15.1%

- 최근 3년간 자치구별 ‘내 지역 지킴이’ 활동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175,694건에서 2024년은 144,533건으로 활동 실적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광진구(20,241건 → 9,897건), 서대문(2,225건 → 1,481건), 구로구(5,070건 → 2,747건), 금천구(1,569건 → 669건), 관악구(29,145건 → 16,326건), 강남구(55,727건 → 26,902건) 등은 활동 실적이 절반이상 감소되었는바, ‘내 지역 지킴이’ 활동의 지속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4년 자치구별 ‘내 지역 지킴이’ 활동 인원 현황 〉

(단위: 명, '24. 12월말 기준)

자치구명	인원	자치구명	인원	자치구명	인원	자치구명	인원	자치구명	인원
종로구	211	동대문구	203	노원구	266	강서구	364	관악구	333
중구	235	중랑구	219	은평구	212	구로구	245	서초구	235
용산구	244	성북구	288	서대문구	196	금천구	111	강남구	234
성동구	254	강북구	163	마포구	228	영등포구	184	송파구	268
광진구	190	도봉구	159	양천구	246	동작구	233	강동구	248

〈 최근 3년간 자치구별 ‘내 지역 지킴이’ 활동 실적 〉

(단위: 건, '24. 12월말 기준)

자치구명	2022	2023	2024
계	24,818	175,694	144,533
종로구	-	111	155
중구	-	1,087	5,152
용산구	701	4,330	6,996
성동구	112	1,122	2,108

자치구명	2022	2023	2024
광진구	-	20,241	9,897
동대문	79	284	909
중랑구	33	2,403	5,354
성북구	2,152	3,837	5,798
강북구	4,560	2,418	2,776
도봉구	1,356	9,370	7,801
노원구	192	14,072	12,460
은평구	1,217	3,841	4,112
서대문	1,016	2,225	1,481
마포구	-	600	692
양천구	28	232	206
강서구	1,516	3,412	9,626
구로구	1,828	5,070	2,747
금천구	209	1,569	669
영등포	2,832	1,921	1,892
동작구	-	133	6,199
관악구	2,348	29,145	16,326
서초구	675	1,586	3,582
강남구	-	55,727	26,902
송파구	97	2,737	3,739
강동구	3,867	8,221	6,954

3)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사업

-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사업은 서울시민 인권 취약분야 및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대책 강구를 위한 것으로, 9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8천 1백만원을 집행하여 16.6%의 불용률(불용액 1천 6백만원)을 보이고 있음.

〈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사업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97,200	81,017	16,182	16.6%
사무관리비	97,200	81,017	16,182	16.6%

- 다만, 2024회계연도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용역 예산 편성은 2건의 용역을 위하여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용역 현황을 살펴보면, 4건의 용역을 8천 1백만원으로 계약하고 있음.
- 이는 당초 예산 편성보다 용역 건수가 증가하였음에도 실제 계약금액은 적은바, 수의계약을 위한 “쪼개기” 발주는 아니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용역 예산을 불용처리(9백만원) 하고 있어, 소요 예산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치밀한 사업계획의 수립을 통한 사업추진이 아닌 주먹구구식 자의적 운영에 따른 사업추진을 반증하는바, 무리한 예산확보로 인해 당해연도에 보다 더 긴급하고 필요한 사업 예산을 적기에 추진할 수 없게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4년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예산 편성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인권 현안 실태조사 용역 9,600,000원*5개월*3건 = 144,000천원	○ 인권 현안 실태조사 용역 9,000,000원*5개월*2건 = 90,000천원
	○ 실태조사 선정 등 위원회 운영 = 10,800천원	○ 실태조사 선정 등 위원회 운영 = 7,2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200,000원*4명*4회*3건 = 9,6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200,000원*4명*4회*2건 = 6,400천원
	- 회의 운영비 100,000원*4회*3건 = 1,200천원	- 회의 운영비 100,000원*4회*2건 = 800천원

〈 2024년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용역 현황 〉

(단위 : 천원)

실태조사명	선 정 자	계약방식	수의 계약 여부	수의 계약 사유	계약금액
서울시 여성 노숙인 인권 상황 실태 조사	알앤알컨설팅주식회사	소액수의	수의계약	여성기업	21,200
서울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알앤알컨설팅주식회사	소액수의	수의계약	여성기업	17,150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 아동 인권 상황 실태 조사	(주)매트리스	소액수의	수의계약	여성기업	19,100
서울시 한부모 이주여성 인권 상황 실태 조사	주식회사코리아리서치	소액수의	수의계약	여성기업	23,520

※ 2024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 212면 참조.

〈 최근 3년간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현황 〉

(단위: 천원)

연도별	과 제 명	조사범위 및 대상	예산액 및 계약금액	수행방법
2022년	서울시 홍보물 인증·이주민 차별표현 실태조사	서울시 및 산하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241개 홈페이지	48,000 (40,000)	용역
2023년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보호 대상 아동의 인권 실태조사	시 아동양육시설 5개소 10~18세 아동 120명 설문조사, 시설장 등 종사자 12명 의견 청취	15,000 (10,118)	시민인권 보호관 직접수행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서울시 산하 7개 공공기관 재직 장애인 직원 321명 설문조사 · 24명 심층면접조사, 인사시설담당자 22명 심층면접 조사	22,000 (21,900)	시민인권 보호관 직접수행 + 부분 용역
	서울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실태조사	종사자 5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420개소 종사자 744명 설문조사 · 종사자, 시설장 등 27명 심층면접 조사	42,000 (34,500)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인권실태조사	종사자 50인 미만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33개소 요양보호사 414명 설문조사 · 82명 심층면접조사, 이용자 25명 심층면접조사, 33개소 현장점검	42,000 (40,000)	

연도별	과 제 명	조사범위 및 대상	예산액 및 계약금액	수행방법
	서울시립병원 보건의료 업무 종사자 인권 실태조사	시립병원 12개소, 보건의료업무 종사자 800명 설문조사·심층면접 23명, 병원 인권업무 담당자 12명 심층면접,, 12개소 현장점검	22,000 (21,900)	
2024년	서울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중도입국 아동·청소년 37명, 중도입국 아동·청소년 부모·형제 5명, 관련 전문가 4명 설문 및 심층 면접조사	17,500 (17,150)	시민인권 보호관 직접수행 + 부분 용역
	한부모 이주여성 인권상황 실태조사	한부모 이주여성 218명 설문조사, 한부모 이주여성 20명, 지원기관 종사자 2명 심층 인터뷰	24,000 (23,520)	
	서울시 여성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여성 노숙인 135명 설문조사 및 15명 심층 인터뷰, 시설 종사자 15명 심층 인터뷰	22,000 (21,200)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시설 관리자 16명, 종사자 190명 설문조사, 시설 아동 38명, 종사자 16명 심층 인터뷰, 16개소 현장점검	20,000 (19,100)	

※ 출처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25년 5월 29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라. 성과지표의 합리적 목표치 설정 필요

- 위원회는 “시민권익구제 강화, 신뢰받는 시정, 안전한 서울 구현”이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개의 정책사업목표와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 위원회 성과지표 중 “직권감사 및 직접조사(+민원배심) 처리건수(건)”와 “감사·조사·감시 결과 조치건수(건)”는 2023년 목표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 하였음에도 2024년 목표를 2023년 실적에 못 미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등,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낮은 수준의 성과지표 목표를 설정하고, 초과 달성하는 행태를 전례답습적·주먹구구식으로 반복하는 것으로 보임.

-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성과목표관리제도”의 핵심은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지표의 속성으로 결과(outcome) 지표와 도전적인 수준의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며, 향후 달성도를 의식하여 보수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을 경계하고 예산을 고려하여 도전적인 수준의 목표치를 산정해야 한다고⁶⁾ 하고 있는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에 있어서 보다 적정하고 현실성 있는 수립 및 추진을 통한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성과지표 달성 현황 〉

정책사업목표 :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2년 달성성과	'23년 달성성과	'24년 달성성과
직권감사 및 직접조사(+민원배심) 처리건수(건)	처리건수 합산	목표	61	76	103
		실적	90	136	120
		달성률(%)	148%	179%	117%
감사·조사·감시 결과 조치건수(건)	처리건수 합산	목표	257	267	330
		실적	269	405	373
		달성률(%)	105%	152%	113%

- ※ “성과목표관리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결산서 작성 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6) 서울특별시 결산감사위원,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의견서』, 2025년 5월 27일, 83면 재인용.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 변동표

4. 성과보고서

전 문 위 원

정 찬 일

입법조사관

최 문 숙